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배포일

2023. 9. 21.(목)

담당

도건 (010-9686-6068)

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대법원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 "판결문대로 '비리공무원'일 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진교훈 선대위 측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❶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결단이지요, 권한이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여론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의 여러 가지 양심선언, 공익 신고에 대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런 인식을 많이 국민께서 가지고 계셨고 이런 부분이 여론이 반영이 돼서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재판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라는 인식이 많은 시민분의 여론 형성에 들어가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❷ 제가 그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위에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보냈어요. 공문을 첨부해서 SNS에 올렸는데 공익신고자이면서 부패 신고자로 저는 확인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회신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거죠. 재판에서는 보호를 못해준다는 거지, 원래 공익신고자 지위는 맞는데 보호를 해주는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부인데 형사 책임에 대해서 보호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발언이다. 김 후보가 무죄판결을 받은 공소사실 1가지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했으나 그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자신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있는데 그에 따른 형사책임 감면의 효과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이다. 진 후보 선대위 측은 법원이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감면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확정하며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본인이 공익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폭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판결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 후보는 비리공무원일 뿐”이라며 “다시 구청장으로 뽑아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끝

※ 고발장 첨부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용연 (진교훈 후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락처: 010-3695-7438

2. 정춘생 (진교훈 후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락처: 010-4528-3376

피고발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대방건설빌딩 8층 (선거사무소)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2023년 10월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 후보자입니다. 피고발인은 2022년 6월에 있었던 8회 전국지방선거에

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되었다가, 2023년 5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발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한 공무상비밀들을 누설하였다는 것입니다.

2. 범죄사실 요지

피고발인은 2023. 9. 6. 채널A 방송사의 라디오프로그램인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여 진행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증제1호증).

❶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결단이죠, 권한이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여론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의 여러 가지 양심선언, 공익 신고에 대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런 인식을 많이 국민께서 가지고 계셨고 이런 부분이 여론이 반영이 돼서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재판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라는 인식이 많은 시민분의 여론 형성에 들어가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❷ 제가 그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익 신고자 지위에 있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보냈어요. 공문을 첨부해서 SNS에 올렸는데 공익 신고자 이면서 부패 신고자로 저는 확인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공익 신고자로 회신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거죠. 재판에서는 보호를 못해준다는 거지, 원래 공익 신고자 지위는 맞는데 보호를 해주는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부인데 형사 책임에 대해서 보호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2023년 10월 11일로 예

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구체적 고발이유

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라는 발언의 허위성

피고발인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라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피고발인이 당선무효가 된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공소사실이 1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죄가 된 공소사실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이 무죄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발인이 청와대 감찰반원으로서 감찰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카카오톡 내용과 내부메신저 대화내용을 각각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기자들에게 유출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카카오톡 내용과 내부메신저의 내용 자체가 공무상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 외에 피고발인이 누설한 다른 모든 공무상비밀들에 관해서는 전부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렇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명백한 사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무죄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임이 판결문 자체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마치 조국이 유죄를 받으면 자신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가 무죄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국이 유죄를 받

든 아니든, 그 어떤 경우이든 피고발인 본인의 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범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것은 그로 인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무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피고발인이 가지는 평가나 의견일 것이므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태우는 무죄’라는 표현과 결부시킨다면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평가나 의견을 넘어서서 이는 명백하게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목적 하에 유권자들의 오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공익 신고자 지위는 맞는데 ~~”라는 발언의 허위성

피고발인은 “법적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공익 신고자로 회신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거죠. 재판에서는 보호를 못해준다는 거지, 원래 공익 신고자 지위는 맞는데 보호를 해 주는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부인데 형사 책임에 대해서 보호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피고발인 발언을 정리하자면, ‘권익위원회가 인정해 주었으니 나는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 ‘공익신고자 지위는 맞는데 법원 재판부는 단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못해주겠다는 것이다’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말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여기서 피고발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공익신고자의 지위가 인정되

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인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인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권익위원회의 행정적 조치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공익신고자 지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발인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었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에게 공익신고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점은 더 이상의 논의여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고정불변의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자신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있는데 그에 따른 형사책임 감면의 효과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는 인정되는데 그 지위에 따른 ‘효과’만 못받았다는 것인데, 명백한 거짓입니다. 판결문에 명백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은 지위는 인정되는데 보호는 못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감면 효과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거짓 발언은 전적으로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은 본인이 공익을 위해 청와대의 비위를 폭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판결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발인 김태우는 비리공무원일 뿐입니다. 피고발인 김태우는 특정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아 오면서 그 건설업체 사장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서 청와대 감찰반원으로서 간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청와대 감찰반 활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했던 것을 악용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기가 근무할 자리를 만들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위들 때문에 청와대를 쫓겨났고 감찰과 징계까지 받을 처지가 되자, 피고발인이 그때부터 비로소 공무상비밀들을 언론에 유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비리공무원의 작태입니다. 피고발인 김태우의 이러한 비리들은 유죄판결문에 명백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은 피고발인 김태우가 본인의 비리를 모면해 보려는 불순한 동기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김태우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강서구청장이 사라지고 구청장을 다시 뽑는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구청장으로 뽑아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채널A 인터넷기사(2023.9.6.자) - 김태우 “전략공천이든 경선이든 당 결정 따를 것...어느쪽도 자신” (인터뷰전문 포함)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HFsSDLExC1w>)

2023. 9. .

고발인 김용연

고발인 정춘생

서울 강서경찰서 귀중